

민주,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출... 도이치·명태균 집중

오는 14일 본회의 제출 예정 수사대상 압축·제3자 추천 변경 재표결때 與 이탈표 확보 전략 여 “자기모순·정치적 타락 상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대상을 축소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가 개입된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야당이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내용을 수정해 국회 재표결때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수정안에는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온갖 비위와 국정농단 개입 의혹이 있지만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김여사 공천·선거개입 의혹에 국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선, “제3자 추천방식도 포함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시했던 방식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요구하는 특검을 받들기 위한 조치”라며 “민주당은 특검법 통과를 위해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추천 범위까지도 제3자까지 열어놓는 수정안을 올리는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만 13가지로 매우 방대하다. 추천 권한도 여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특검의 수사 가능 범위가 너무 넓고, 야당만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다수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식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표결 때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독소 조항을 뺀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특검법은 1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해야 한다.

법안이 폐기되지 않으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이니 특감관이니 하는 것으로 지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특검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고 민심을 거부한다면 윤상 김건희·윤석열 부부와 함

께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벌써 2주기가 지난 해병대원 순직사건 진상규명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은 특검과 동시에 채해병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세용 특검법안은 훗날 민주당의 자기모순과 정치적 타락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흐트러려는 교만하고 얄은 술수”라며 “총 14개 수사 대상을 파담은 기존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거기에 대해 제가 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윤덕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 증액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갑·사진)은 11일 열린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년 예산에서 25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100억원대이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22년, 2023년 연속 감액되다가 2024년 85억원, 내년 예산안 역시 85억원으로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감액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최소한 2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역 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이나 한 듯하다”며 “2023년, 2024년 연속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축소시키더니 올해는 선심 쓰듯 동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감액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언론은 효율성, 경제성을 따



져서는 안 된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지역신문 저널리즘 품질조사 결과에 지역 언론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면서 “지역신문전국지가 지역 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되고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역 소식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참여, 공동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유인촌 장관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최소 25억원을 더 전출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태 도의원 “전남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 최하위”

전남지역 학교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은 11일 “전남의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율이 17.4%로 전국 평균인 44.1%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전남 지역 학교도서관에 충분한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양질의 독서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당 1명 이상의 사서교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다.



구례군의 경우 지역 내 28개 학교 중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에 순회사서 1명만 배치돼 있으며, 나머지 13개 학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어 학교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학생들이 긴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비상설특별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본사회위원회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장에 이 대표를, 수석부위원장에 박주빈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사회 정책은 이 대표가 대선 때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뒷받침할 요소로 기본주거와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을 제시해왔다. **서울=김선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野·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

한동훈 “국민 건강만 생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면서 야당과 전공의 등 의료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드디어 오늘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게 됐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목표는 국민의 건강이고 방법은 소통과 대화”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이,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맡을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중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고 하

다”며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다”며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시길 바란다”며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겠다.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여론전 총력

무죄 촉구 탄원서명 100만명 넘어 15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나올 앞둔 11일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10시 기준 101만 144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

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원의 친명계 인사들도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

이 대표가 창립 멤버이자 박승원 광명시장 등 친명계 원의 인사로 구성된 전국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KDLC 1700여명 회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친인척은 죄가 있어도

조사를 받지 않고 오로지 거대 야당 대표만 어떻게든 잡아낼겠다는 일념으로 향후 대권후보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중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